

의안
번호

740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9. 11. 11(수)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11. 16(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9. 11. 30(월)

2. 제안이유

- 가.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 나.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만을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를 법령과 조례, 기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중구의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외 위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 위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함(안 제6조)
- 다.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함(안 제7조)

- 라.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위원회 위원은 당해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 바.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함과 동시에 회의개최 일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10조)
- 사. 위원회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함(안 제11조)
- 아. 위원회 관리 및 정비(안 제12조)
- 자.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관련법령 : 붙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라. 주요 타 자치단체 조례

구 분	조 례 명	제·개정 일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09.5.11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12.30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01.4.10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08.7.31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08.12.22

다.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2009.10.16)

-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됨.
- 위원회 수는 증가하나 일부 위원회는 최근 2년간 운영 실적이 없고 여성위원 현황이 19%로 정부권고 비율(40%)에 미달됨.
- 향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우리 중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제고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만을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다른조례과의 관계」, 「적용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안 제6조에는
 -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 중구의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외 위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토록 하였으며,
 - 또한, 위촉직 위원 중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었음.
-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해촉사유」, 「위원명단공개」,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0조에는 회의 안전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에는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 제12조에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 제13조는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다. 검토의견으로는

- 본 조례안은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 심의회,협의회 등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조항별 법률적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위원 위촉과정에서부터 회의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특히 이를 통해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